

제28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제28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이주민·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14:00~17: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727-2431(정평), 924-9970(이주)

발제 1 난민 이슈(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2 다문화 이슈(김정연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3 정책변화와 분석(이규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발제 4 교회의 역할(유상혁 신부/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회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1년 사회교리 주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제28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이주민·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

1.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14:00~17:00
2.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3. 대상: 사회교리학교 졸업생, 관심 있는 신자 누구나
4. 주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주사목위원회
5.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경향으로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화되고 있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점검·분석하여 이주민·난민을 만나는 교우와 실무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합니다.
6. 취지: 우리나라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수는 18,838건으로 다양한 문제들로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중교통, 식당, 학교 등 어느 곳에서든 쉽게 만나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생소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과 난민들의 상황을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7. 방향: 강연회를 통해 올바른 인식으로 낯선 이들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주민과 난민들이 국적이나 법적 지위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8. 내용

시간	내용
12:00~12:30	모임, 접수(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주차장)
14:00~14:10	시작 기도(하성용 신부)
14:10~14:40	발제 1. 난민 이슈(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4:40~15:10	발제 2. 다문화 이슈(김정연,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10~15:20	휴식
15:20~15:50	발제 3. 정책변화와 분석(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50~16:20	발제 4. 교회의 역할(유상혁 신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16:20~16:50	종합토론, 질의응답
16:50	마침 기도(하성용 신부)

9. 문의: 02-727-2431(정평) / 02-924-9970(이주)

난민 이슈

박영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세계 난민 현황



난민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세계 난민 현황

65% 강제이주 인구의 65%는 5국가 출신
originate from just five countries

Nearly two-thirds of all refugees under UNHCR's mandate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come from just four countries.

Syrian Arab Republic	6.3 million
Venezuela	6.2 million
Ukraine	6.1 million
Afghanistan	6.1 million

32% 가장 많은 인구를 보호하는 5국가
hosted in five countries

Colombia, German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ürkiye and Uganda hosted almost one-third of the world's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slamic Republic of Iran	3.8 million
Türkiye	3.1 million
Colombia	2.8 million
Germany	2.7 million
Uganda	1.7 million

출처: 유엔난민기구

전세계 난민 현황

47 MILLION are children **아동**

At the end of 2023, of the 117.3 million forcibly displaced people, an estimated 47 million (40 per cent) are children below 18 years of age.

518,600 **난민**
귀환하거나 재정착한 난민
refugees returned or were resettled

Some 433,600 refugees return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during the first half of 2024 while 85,000 were resettled (with or without UNHCR's assistance).

4.4 MILLION stateless people **440만명은 무국적자**

Data on some 4.4 million stateless people residing in 97 countries was reported at mid-2023. The true global figure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2 MILLION **난민으로 태어난 아동**
children were born as refugees

Between 2018 and 2023, an average of 339,000 children were born as refugees per year.

71% **보호 중**
난민 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71%는 저/중간소득 국가에서 보호 중 hosted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host 71 per cent of the world's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rovide asylum to 22 per cent of the total.

최저개발국가는 전체의 22% 비호 중

69% **69%는 이웃 국가에서 보호 중**
hosted in neighbouring countries

69 per cent of refugees and other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lived in countries neighbouring their countries of origin.

출처: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 신청자 처우 현황

간단히 보는 2023년 난민 신청자 처우 현황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4.01.29회신)

18,838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8,838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약 200명
난민 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연간 약 200명 지원 규모입니다.(2024년도 예산 기준)

3.3개월
2023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평균 지급 기간은 3.3개월입니다 (지급규정 기간 6개월)

2%
2023년 전체 신청자의 2%인 379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10명
2023년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인정으로 입국한 재정착난민은 10명입니다.

7,912건
2023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7,912건입니다.

1 **첫 난민처우협의회**
제도 시행이래 첫 난민처우협의회가 있었습니다. 5개 부처 10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난민 인정자 처우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출처: 난민인권센터

한국 난민 현황

간단히 보는 2023년 국내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4.01.29회신)

18,838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8,838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9년 15,452명 이후 최대입니다.

101명
2023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1명입니다.

1.53%
2023년 난민 인정률은 1.53%입니다.

1,432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432명입니다. (난민인정 취소자 제외)

129명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129명입니다.

2,609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자는 총 2,609명입니다.

103,760건
1994년 제도 시작 후 2023년까지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출처: 난민인권센터

난민이란

난민법에 따른 "난민"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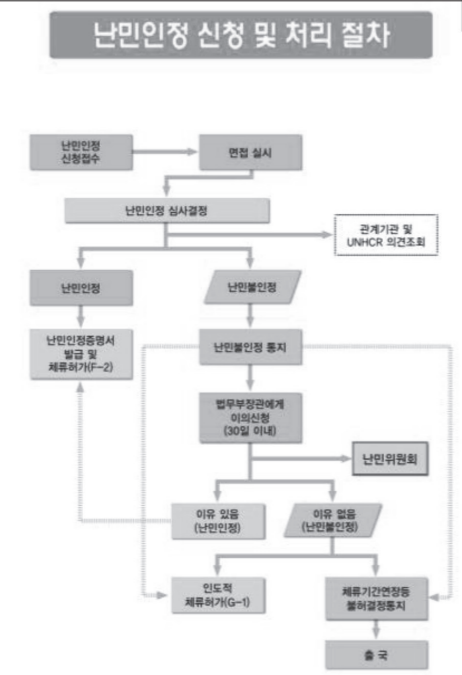
강제이주

- 분쟁, 자연재해, 인권침해, 폭력,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집 또는 상주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경우

난민이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가입국은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담함
- 한국은 한국은 1992년 11월 11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여 1992년 12월 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93년 3월 3일에 조약 제1166호로 국내적으로 시행함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부닥치게 되는 난관1 - 난민심사: "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난민이란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 "신청인이 출신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협약상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견딜 수 없게 되거나 그가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같은 이유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합리적인 정도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인의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Cardoza-Fonseca 사건

- "외국인은 출신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박해 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호주 대법원 Chan Yee Kin 사건

- "물론, 박해의 가능성이 억지스러운 경우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박해를 받을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의 공포는 협약과 의정서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부닥치게 되는 난관2 - 체류의 불안정성

- 난민신청자들은 임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G-1-5 체류자격 받음
- 난민신청과 별개로 신청해야 함(난민신청은 난민과에, 체류자격 신청은 체류관리과에)
- 체류기간은 3-6개월로, 매우 짧은 간격으로 갱신해야 하며, 매번 수수료 납부해야 함
- 체류기간 도과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 G-1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며 도과기간이 31일 이상이면 범칙금 부과. 출국명령 유예로 사실상 체류 허용하나 취업허가 받을 수 없음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부닥치게 되는 난관3 - 생계와 의료

난민신청 후 6개월 동안 취업허가 받을 수 없음

- 생계비 지원제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임
- 2023년 기준 난민신청자의 2%만이 생계비 지원 받음. 지원수준 또한 3개월 간 평균 43만원으로 매우 낮는데, 정부는 이 예산마저 삭감함.

6개월 후에도 취업허가 받기 까다로움

-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허가 받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임

장애, 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함

-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 100%이며 병원은 국제수가 적용

인도적 체류자

2023년 기준 난민인정자는 1,432명, 인도적 체류자는 2,609명(내전 중인 시리아, 예멘 국적자가 가장 많고, 그외 아이티, 미얀마 등 국적자)

난민법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인도적 체류자격: G-1-6

- 가족결합에 대한 권리 인정받지 못해 외국에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을 데려올 수 없음

- 취업허가는 난민신청자와 동일하게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단순노무 업무로 한정

- 사회보장권 인정받지 못함.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나, 지역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평균보험료의 70% 하한으로 적용(연 소득금액 360만원 또는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100% 하한으로 적용)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부닥치게 되는 난관4 - 편견과 차별

"남용적 난민신청자"

- 대부분의 난민신청자(98%???)가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신청한다는 편견은 난민심사과정 및 결과뿐만 아니라, 난민신청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침

"우리가 아닌 남"

- 한국의 온정으로 체류가 허용된 외국인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 온전한 사회구성원이 아니라는 인식
-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으로 인한 이질감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호교류의 제약
-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

마치며

- 난민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주한 사람으로 이주민으로서의 취약성에 더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음
- 한국에 오는 난민이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은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를 보장받는 것. 이 관문을 통과하는 난민은 2023년 기준 1.53%.
- 그러나 체류 보장은 시작에 불과함. 그 이후에는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이라는 또 다른 끝나지 않는 관문이 기다림
- 한국은 2012년 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지만, 정책은 여전히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 결과 난민은 그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은 전무하고, 난민심사 지연과 난민인정의 어려움으로 수년간 불안정한 "난민신청자" 지위로 버텨야 하는 한편,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감사합니다

<발제 2>

다문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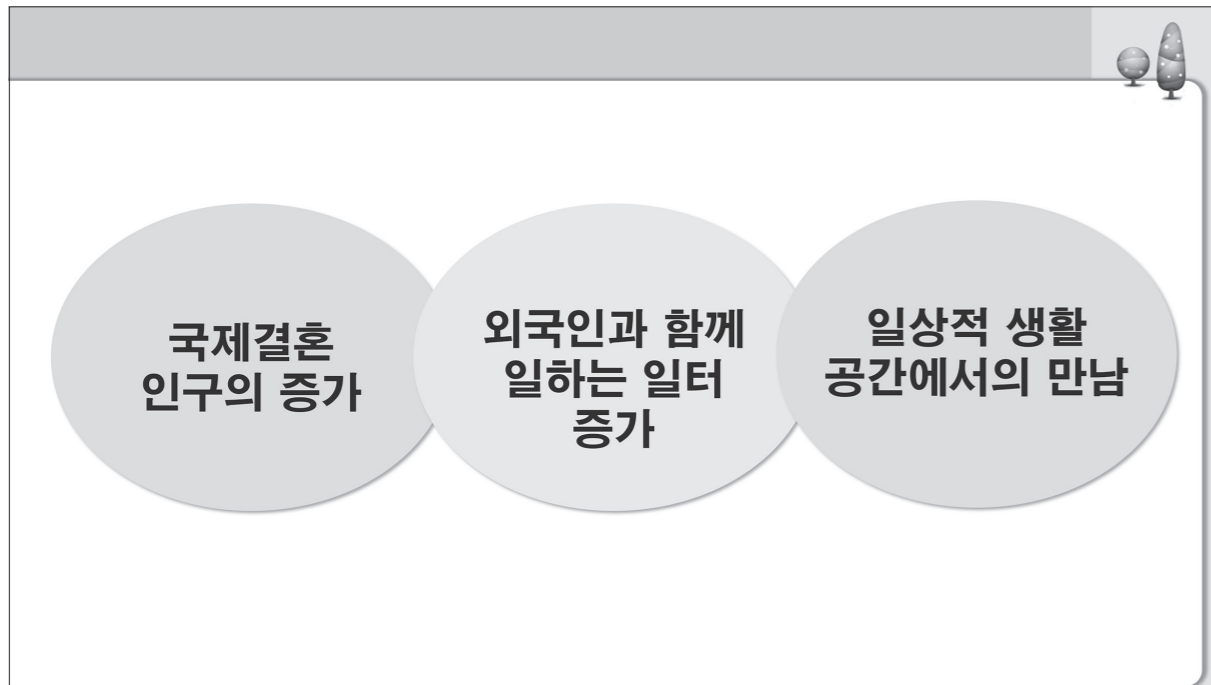
김정연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감 기부회원 신청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사회





한국사회는 이제 ⇒ 다문화사회로 완전히 진입

- ▶ 베트남계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 등 다양한 한국인 출현!
- ▶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경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장기근로·선원·영주 등의 비자를 보유한 장기체류자 195만7000명과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55만7000명을 더한 규모다.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단위:%)

연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
2021	4.57
2022	4.87
2023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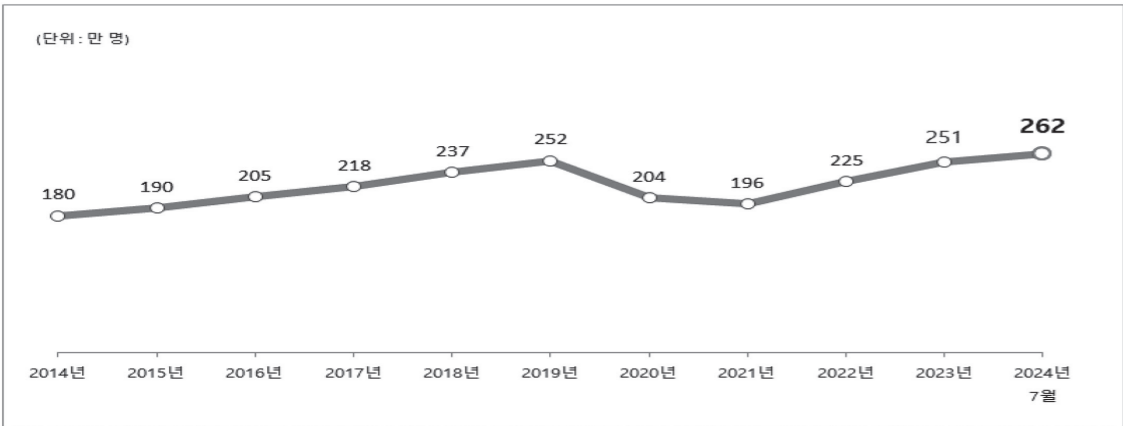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3년 10월 23일 기사자료

한국사회 내 외국인 현황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 2024년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6,007명
-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수는 100만 명,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98만 명(57만+41만)으로 향후 5년 안에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400만 명(전체인구 대비 약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2024년 7월말 기준 체류 외국인 통계월보

▪ 이러한 유형의 국제결혼은

- 첫째** 이들의 주 거주지가 한국 사회 내가 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둘째** 이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태어나서 이민 2세로서 성장한다
- 셋째** 이러한 국제결혼의 규모가 한국사회에 지대하고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게 됨

2 다문화가족 현황

-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존재와 이들이 구성한 가족, 그리고 자녀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의 중심
- 주로 조선족 동포, 동남아 지역, 구 소련 지역 독립국가들의 여성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전제로 이주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기 시작
- 이들은 현재 ‘우리 아내’, ‘누구 집 며느리’, ‘우리 엄마’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

(1) 결혼이민자 현황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 2023년 국내 전체 혼인 건수는 20만 여건이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만 여건으로 국제결혼비중이 10.2%로 나타남.
- 2024년 7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79,106명, 혼인귀화자는 163,845명으로 모두 포함하면 34만 여 명에 이르고 있음.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 현황〉

(단위: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4
인원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79,106
전년대비 증감률	0.1%	0.2%	0.5%	2.0%	2.4%	4.3%	3.3%

〈혼인귀화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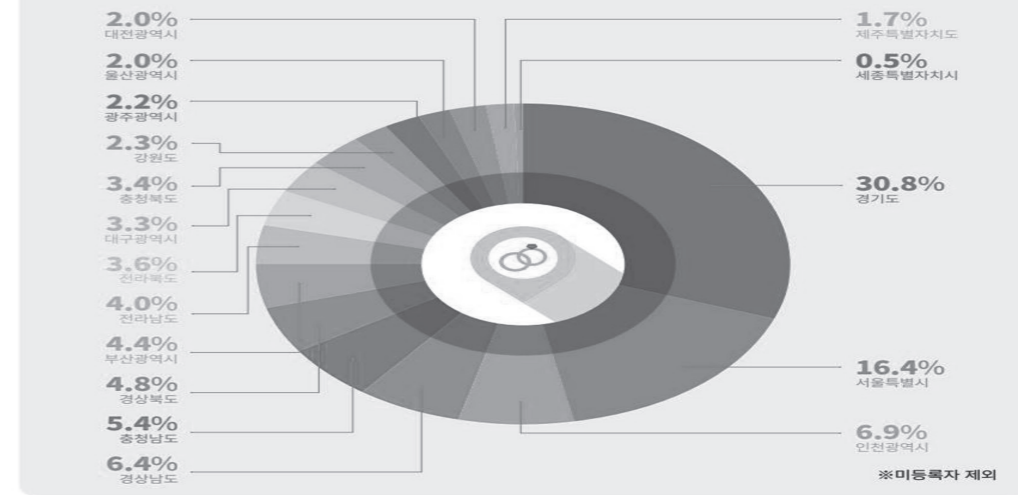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4년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93,953	101,560	108,526	114,901	121,339	129,028	135,056	163,845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2024년 7월말 기준 체류 외국인 통계월보

〈지역별 결혼이민자 거주현황〉

그림 3-3 거주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2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4.7.31.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총계	국적								
		중국 ²⁾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기타
전체	179,106	60,624	(21,230)	41,145	15,964	12,722	9,351	5,247	4,863	29,190
	100%	33.8%		23.0%	8.9%	7.1%	5.2%	2.9%	2.7%	16.3%
남자	35,261	14,134	(8,269)	4,808	1,318	629	142	3,541	866	9,823
	19.7%									
여자	143,845	46,490	(12,961)	36,337	14,646	12,093	9,209	1,706	3,997	19,367
	80.3%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7

(2)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2022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23)

다문화가정 자녀(국내출생+귀화 및 외국국적)는 2022년 기준 299,440명으로 집계됨

- 초등학교 이하가 223,508명으로 77.2% 차지
- 연령대를 살펴보면 미취학 연령(만 6세 이하) 36.4%(109,081명), 초등학교 연령(만 7~12세) 36.6%(109,519명), 중학교 연령(만 13~18세) 27.0%(80,840명)

다문화구성원 유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문제적 상황들

1) 사회문화적 적응의 문제

1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문화,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 폐쇄적 사회연결망 구조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거나 그 관계를 넓혀가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24년 9월 15일 기사자료

2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

-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부장적 권위의 남편과 시댁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갈등과 민족우월주의에서 오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경험
- 이미 한국여성에게서 포기된 '시부모 부양'의 전통에 대한 복종, 가사와 농사일 등의 이중 부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전통적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를 지속함으로써 이들에게 가부장적 '가족문화 강화'의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

3 지역사회의 문화적 대응력 미비

-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사회의 내부 대응력 혹은 완충력 미비.

즉, 지역주민의 부족한 인식,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접촉과 충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식적, 제도적 대응 정책 등이 여전히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들

2) 사회통합의 문제

(1) 인종적·문화적 차별

- 한국사회의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시각은 이중적이거나 서열화되어 있어 외국인의 피부색과 출신국가에 의해 결정.
즉, 흑인이냐 백인이냐의 인종적 기준의 토대 위에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왔느냐 혹은 못사는 나라에서 왔느냐 하는 사회구조적 기준이 더해져 흑인이냐 검은 피부색을 가지는 외국인과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경향
-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도 외국인에 대한 세계관과 비슷하게 위계적이고 이중적인 측면을 보임
예) 연변 사투리를 쓰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재미 동포는 우대하는 경향

(2) 문화적 몰이해

- 한국사회 구성원이 외국 문화에 대해 가진 제한되거나 왜곡된 이해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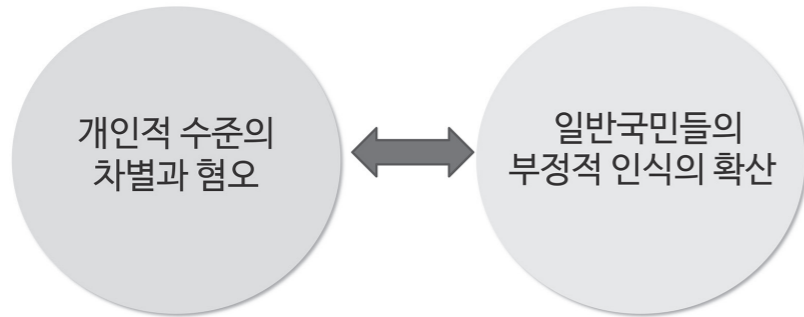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미국인이 백인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미국 중심의 획일적인 서구관과 문화관을 키워왔기 때문

- ➔ 그 결과 미국인이 아닌 다른 서구인과 그들의 문화권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거나 인종에 관계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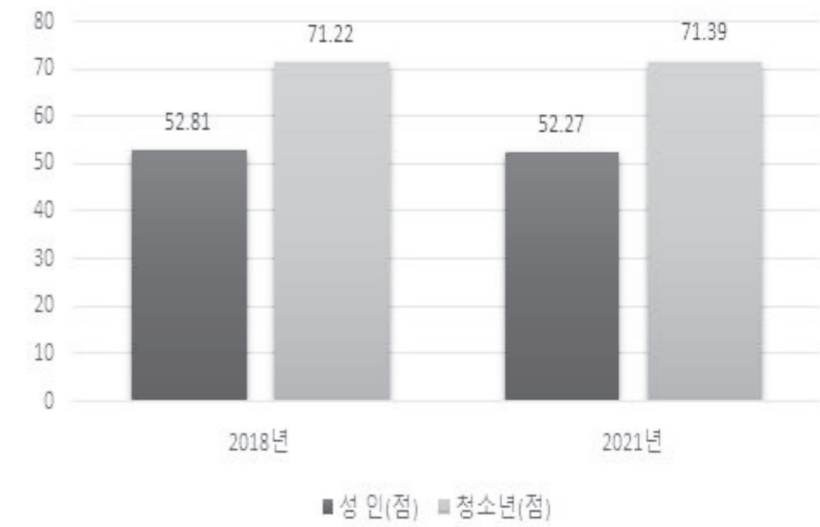
- 국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한국의 순혈주의에 입각하여 그 심각성을 드러냄
- 특히 과거 한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시절,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심각하여 혼혈인은 학업, 취업, 결혼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 이러한 경향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외국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가 부족한 것과 동시에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도 부족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한국문화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부실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 한국사회의 이주민 통합은 이주민의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수용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

현재 이주민에 대한 생각은?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점)〉



다문화 감성 분석
(기간 : 2019.6.30 - 2019.7.30)



출처 : 노컷뉴스, 2019. 7.31. 보도자료

이주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이전에 비해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는 양상

- 2021년에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 2018년 동일 조사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더욱 악화됨.
- '일 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응답은 2018년 30.2%에서 2021년 34.6%로 4.4%포인트 증가.
- '경제적 기여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23.5%에서 33.1%로 9.6%포인트 증가
- 이밖에 '범죄율이 상승했다' (2018년 35.5% → 2021년 46.7%) 등 부정적 반응이 증가 (여성가족부, 2022).

➢ 현재 우리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내기도 전에 ‘반다문화정서’의 움직임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

➢ 따라서 다문화적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

➢ 둘째,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베푸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문화를 주입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는 것.

- 일부 대중매체의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태도는 관찰됨. 심지어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조차 포기한 전통적 가치와 역할들을 이들에게 강요.

- 이는 혐오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는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열등하게 대하거나 ‘이국적이고 신기한 것’으로 주변화

➢ 첫째,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현상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는 순혈주의에 입각해 한국적인 것만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시선. 다른 인종, 민족, 문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거부적인 태도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 이런 요소를 사회질서와 복지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함.

- 중국교포 및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 반다문화주의 활동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온정주의적 시혜의 대상”

동정으로 대하거나 혹은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

결혼 이주여성..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때문.

사회적 배제는 주로 정체성에서 비롯됨.

합법적 영주권자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정체성에 근거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기 일쑤.

이런 사적, 경험적 세계에서의 부정적 현실은 흔히 공적 영역에서 인정되는 평등과 권리를 압도. 즉, 법적 권리와 실제적 권리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발견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공부는 어렵다.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다. 집에서도 입 벌릴 일이 없다.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람이다. 참관 수업 때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창피하다. 아이들이 놀린다. 피부색이 까맣다고."

(연합뉴스, 2018. 6. 17)

"차별은 가족 안에서도 존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들에게 '학교 가서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그때 내가 우리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지 10년 된 노은옥(37)씨

"자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적으로 헛갈리지 않기를 바라 오랫동안 내 모국어를 가르쳐 본 적 없다"

- 수 많은 이주여성의 공통된 이야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출생으로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에도 문제가 없으며,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

그러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

“ ‘우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러한 시각이 주류를 이루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을 ‘우리’의 일로서 해결해가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제로서 도움을 베푸는 역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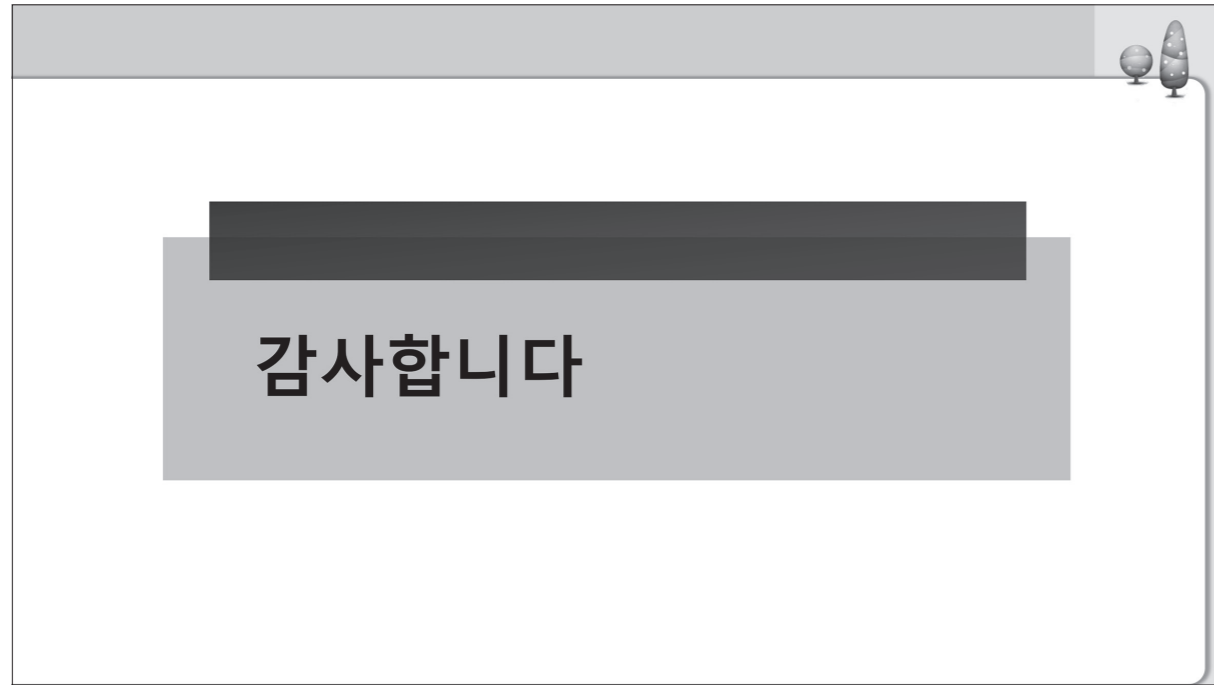
문화적 감수성과 수용적 자세의 필요성

- 이제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이전보다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 국가의 정책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감수성**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

▶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변화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각각의 고유문화를 인정하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개방된 자세를 취하는 것.
- 이를 위해 다문화 실천가들은 소리 없이 권력화, 낙인화 되고 있는 **인종주의적 미디어, 법, 정책, 교육 등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정관념, 갈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모순’들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도처 에 퍼져있어 ‘내 안의 인종주의’ 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



<발제 3>

정책변화와 분석

이규용 선임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KLI
한국노동연구원

CONTENTS

- I 이민자 활용실태
- II 정책 현실과 쟁점
- III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I
이민자 활용실태



KLI
한국노동연구원

KLI
한국노동연구원

01 개념과 통계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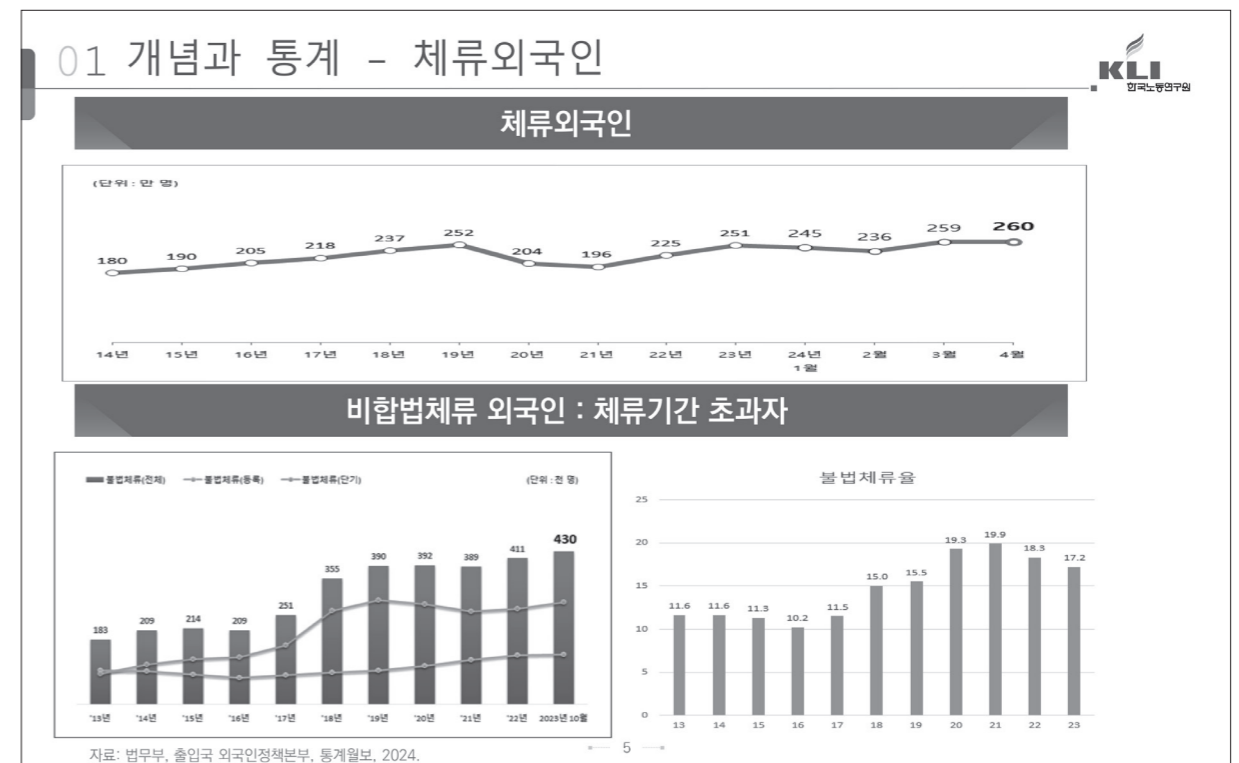
외국인, 이민자, 상주외국인

◇ 외국인(력) 통계는 통계작성 및 대상자 범주에 따라 차이

- 출입국·외국인통계(법무부) : 체류자격별 출입국(flow) 및 체류현황(stock)
 - 외국인 : 외국국적 소지자
 - 이민자 : 1년 이상(91일) 이상 체류를 목적 거주자 (해외출생자, 이주배경인구 등)
 - 외국인력 :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vs 외국인 취업자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통계(행안부) : 91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주외국인(단기체류자격 입국 불법체류자 포함)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 15세 이상이면서 91일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단기 체류자격 입국 불법체류자 제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4년 1월 28일)

4



01 개념과 통계 - 외국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2024.4,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61,630	78,684	479,205	3,741

- 전문인력 :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활동, 특정활동
-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 :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관광취업(기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외국인(2024.4, 단위 :명)

구분	총계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934,940	55,071	545,192	189,906	144,771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4.4

02 상주외국인 (이민자) 현주소 2



상주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

- 상주외국인과 경찰조사의 고용률 편차 축소 → 비취업비자의 고용률이 점차 감소함을 시사
- 상주외국인의 고용률 감소 : '17년 68.1% ⇒ '23년 64.5% ⇒ 고령화 영향 : 재외동포 체류자격자 33.0%가 60대 이상
- 상주외국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경제활동실태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비교(천명, %)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	1,023	1,073	1,063	1,108	1,037	833	787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2.5	62.8	63.9	64.3
	고용률	60.8	60.7	60.9	60.1	60.5	62.1	62.6
상주 외국인	실업률	3.7	3.8	3.8	4.0	3.7	2.9	2.7
	실업자	34.5	44.8	50.3	69.5	54.3	36.8	52.3
	경제활동참가율	70.9	71.4	69.1	68.9	68.3	67.6	68.2
	고용률	68.1	68	65.3	63.7	64.2	64.8	64.5
	실업률	4.0	4.8	5.5	7.6	6.0	4.2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03 상주외국인 (이민자) 현주소 1



상주 외국인 추이

- (상주외국인) 상주외국인은 143만 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92.3만명('23.5)
- * 15세 이상이면서 91일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거소신고 포함)
- *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38.6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이며, 전문인력(E-7)은 4.6만명

상주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중 추이 : 15세 이상, %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변화 ('15-'23)
						비중	상주인구 (천명)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430	
재외동포	18.7	23.6	25.2	28.5	28.8	27.0	385	8.3
비전문취업	22.4	19.7	18.9	16.3	16.1	18.8	269	-3.6
기타	9.9	11.6	12.8	13.8	13.3	14.2	203	4.3
유학생	6.4	10.8	10.3	10.8	12.5	13.1	188	6.7
영주	8.3	7.8	8.6	9.6	10	9.1	131	0.8
결혼이민	9.6	8.3	9.1	9.5	9.4	8.4	120	-1.2
방문취업	21.3	15.2	12.1	9.2	7.4	6.1	87	-15.2
전문인력	3.5	2.9	3	3	3.2	3.2	46	-0.3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년도

02 상주외국인 (이민자) 현주소 3



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의 현주소

- 22년까지 입국자수는 매년 4만 명 전후이나 체류자수는 2만 명을 상회 → 낮은 잔존율
-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 전문인력(67개)+준전문인력(9개), 일반기능인력(8개), 숙련기능인력(3개)으로 구성
- 체류규모(만 명, '23년): (전체) 4.4 (전문인력) 1.1 (일반기능) 0.8 (숙련기능) 1.7
- 숙련기능인력(E-7-4 : 고용허가제로부터 체류자격변경)은 '23년 쿼터 확대 등으로 체류 규모 증가세 ('22년 0.5만명, '23년 1.7만명)

특정활동 비자(E-7) 외국인 추이



자료: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년도

03 지역별 인구변동



계층별 인구규모의 변화

	인구규모의 변화(2013~2022년)				
	15세 이상 인구	청년층 (25~34세)	여성 (25~39세)	고령자 (55~64세)	65세 이상
전국	0.7	-0.5	-1.1	3.6	4.6
서울	-0.2	-0.8	-0.9	1.3	4.5
인천경기	1.7	0.5	-0.2	5.8	6.1
광역시	0.3	-0.8	-1.5	2.7	5.1
10만 명 이상	0.9	-0.7	-1.5	4.3	4.6
5만~10만 명 미만	0.2	-1.9	-2.8	2.7	2.6
5만 명 미만	-0.5	-3.5	-4.2	2.3	1.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22년 하반기 자료), 이규용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

03 지역별 인구변동



출생아 및 인구(명, 2000-22년 증감률)

● 출생아동수 '00년 64만 명 → '22년 25만 명

	출생아동수(명)			인구수(명)		
	2000	2022	2000-2022	2000	2022	2000-2022
경기	141,704	75,323	-46.8	9,280,013	13,972,297	50.6
인천	34,433	14,464	-58.0	2,562,321	3,039,163	18.6
제주	8,633	3,599	-58.3	543,323	699,751	28.8
충남	24,733	10,221	-58.7	1,930,234	2,194,196	13.7
대전	19,570	7,677	-60.8	1,390,510	1,466,666	5.5
전국	640,089	249,186	-61.1	47,976,730	52,628,623	9.7
충북	19,628	7,452	-62.0	1,504,722	1,636,328	8.7
강원	19,482	7,278	-62.6	1,559,042	1,556,970	-0.1
광주	21,148	7,446	-64.8	1,375,212	1,454,017	5.7
부산	41,222	14,134	-65.7	3,812,392	3,360,675	-11.8
울산	15,816	5,399	-65.9	1,044,161	1,129,042	8.1
경남	41,680	14,017	-66.4	3,108,674	3,350,883	7.8
경북	35,190	11,311	-67.9	2,813,551	2,657,547	-5.5
서울	133,154	42,602	-68.0	10,373,234	9,667,669	-6.8
대구	32,477	10,134	-68.8	2,538,212	2,393,259	-5.7
전남	26,046	7,888	-69.7	2,134,629	1,856,685	-13.0
전북	25,173	7,032	-72.1	2,006,500	1,804,548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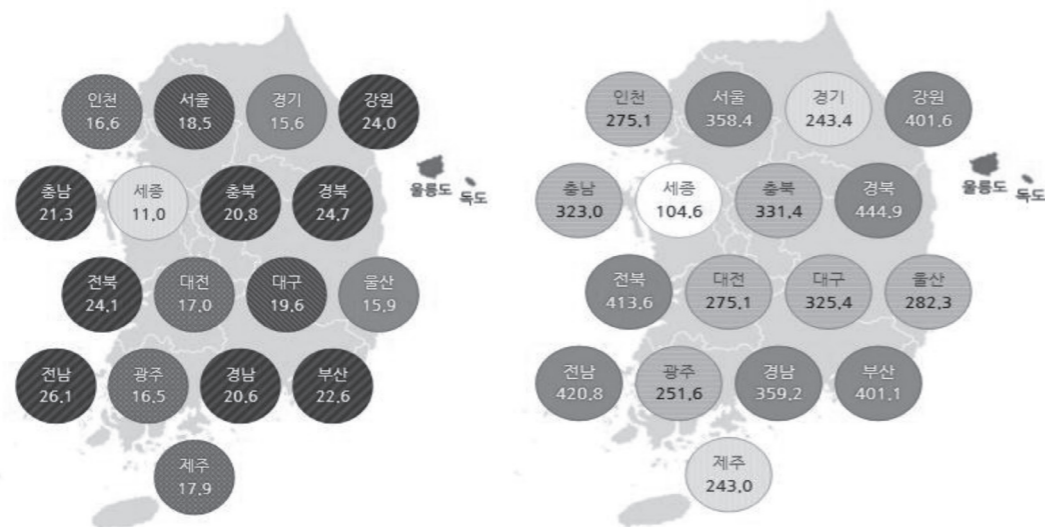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03 지역별 인구변동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KOSI(김색일, 6월 15일)

04 지역별 이민자 수요 현실



지역별 임금 및 일자리 격차

● 생산가능인구 규모별 월평균 임금 지수(서울 = 100) : 소도시 및 군지역의 상대적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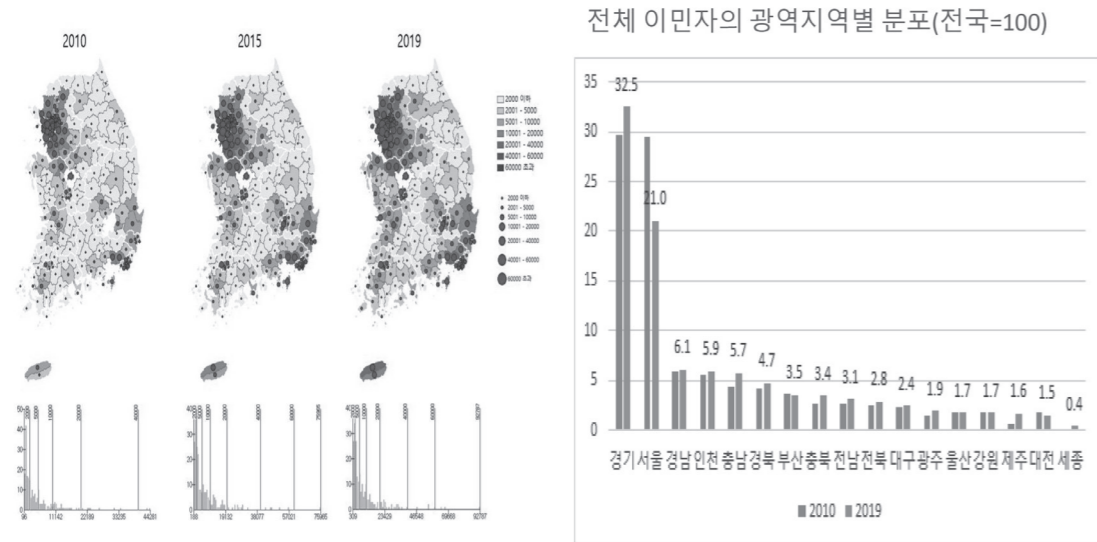
	2013년					2022년				
	전체	청년층 (25-34)	여성 (25-39)	고령자 (55-64세)	65세 이상	전체	청년층 (25-34)	여성 (25-39)	고령자 (55-64세)	65세 이상
전국	91	93	87	94	80	89	94	90	91	79
서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천경기	92	95	89	91	84	92	95	91	91	91
광역시	89	88	80	100	78	86	88	84	90	74
시군-10만 이상	87	90	77	92	70	85	91	82	91	69
시군-5만 이상	77	83	73	82	61	75	87	78	81	53
시군-5만 미만	71	76	70	80	53	66	80	75	74	4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22년 하반기 자료), 이규용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

04 지역별 이민자 수요 현실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자료: 이규용외(2021),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한국노동연구원

05 지역별 이민자 수요의 현실



정주형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

- 정주형 이민자 분포의 변화와 비수도권 지역정착형 이민정책의 한계

< 정주형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 >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장기체류(F2+F5)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54.8	28.0	-26.8	23.5	17.8	-5.7	35.2	21.2	-13.9	27.9	28.2	0.3
인천경기	27.9	50.2	22.3	31.8	38.2	6.4	36.2	41.8	5.6	32.1	48.9	16.8
광역시	8.2	5.4	-2.8	13.5	13.9	0.3	8.9	10.9	2.0	13.0	6.9	-6.1
시군-10만 이상	6.6	12.6	5.9	17.2	19.5	2.3	11.6	16.2	4.6	15.7	12.3	-3.4
시군-5만 이상	1.3	3.0	1.6	7.0	6.1	-0.9	4.4	5.6	1.2	5.8	2.6	-3.3
시군-5만 미만	1.0	0.9	-0.2	6.9	4.5	-2.4	3.8	4.3	0.5	5.5	1.2	-4.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이규용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량과 과제

04 지역별 이민자 수요의 현실



지역별 이민자 분포의 변화 1

- 정주형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화

* 정주형 이민자: 재외동포, 거주, 결혼이민자, 영주권, 국적취득

**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의 수도권 거주비중은 78.2%

< 지역유형별 이민자 변화(전체 및 정주형 이민자) >

	전체 (%)			정주형 이민자		
	2010년	2021년	증감	2010년	2021년	증감
전국	100.0	100.0		100.0	100.0	
서울	29.5	20.0	-9.5	31.2	24.7	-6.5
인천경기	35.2	39.8	4.6	32.4	45.9	13.5
광역시	10.8	11.3	0.5	11.7	8.5	-3.3
시군: 10만 이상	15.3	18.7	3.4	14.2	14.6	0.3
시군: 5만-10만	5.4	6.3	0.8	5.3	4.0	-1.3
시군: 5만 미만	3.7	3.9	0.2	5.1	2.3	-2.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이규용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

06 향후 외국인력 수요 : 2024-2028 전망



I. 인구변동과 외국인력 수요

2024-2028년 외국인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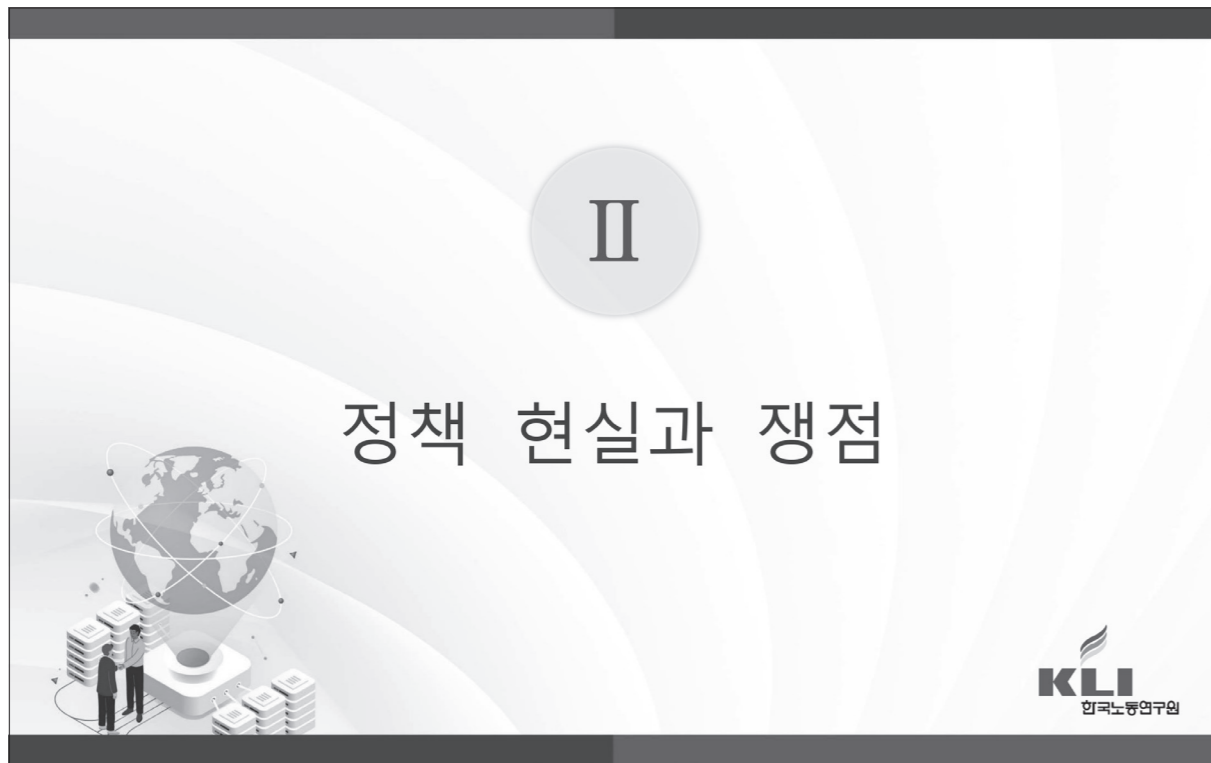
단순직, 숙련기능직에 집중
(이규용외(2024 발간예정),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수요)

- 산업**
 - 농림어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창고업, 음식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직업**
 -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 건설업: 건설 기능직
 - 제조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직 및 조립종사자,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기존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분야(+a)의 비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

관련 제도

고용허가제(E-9), 숙련기능직(E-7-3, E-7-4)



KLI
한국노동연구원

01 정책추진의 현실 : 정책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외국인 이민정책의 추진의 복잡성을 고려한 정책인프라 미흡

- (정책수요) 다양한 정책수요 → 정책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한 거래비용
- (현실)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는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부서간 유기적 연계 부족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역단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및 이에 기반한 정책추진력 필요
 - 통계인프라 부족
 - 지원센터 중심의 정책 추진
 -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전달 인프라와 연계 미흡

중앙정부- 광역- 기초간 정책 연계 협력 체계 기반 작동 어려워

- 제도 운영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비자 등 → 분리 운영에 따른 관리 정책수요의 분리 대응
- 유학생, 동포인력, 이주배경자녀, 동반가족 => 정책수요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체계 내 개별적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일터와 주거 : 교통, 정주 인프라, 주거 공간 부족, 문화, 교육 인프라 수요 증가 → 체감성 있는 정책미흡

- 20 -

01 정책추진의 현실: 위험, 안전관리, 주거, 가족 정착지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현실

산재, 위험 노출 : 언어, 작업숙련, 위험한 작업 특성

- 높은 산재사고 → 이민자에 투영 : 제조업, 건설업 등
- * 요양 중 사망자수 포함한 산재사망자수 : '23년 2,223명(우리나라 전체)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장 내 갈등, 인적자원관리 해소 위한 지원체계 미흡

- 고령화 및 베이비 부머 은퇴 → 외국인 이민자의 숙련수요 증가 : 숙련체류자격자 유치가 아닌 사업장내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 확보 수요 (기능, 작업장관리, 조반장 역할 등)
- 외국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 사용자 고충(찾은 이직, 외국인 공급자 우위에 따른 인력활용의 어려움 증가)
- 직업훈련, 숙련향상을 위한 훈련지원체계 미흡
-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통역 지원 위주의 지원체계 → 지역산업 맞춤형숙련형성, 장기근속 유도, 주거, 교통,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노동시장 통합에 대한 정책 제약 - 지역단위 이민정책의 핵심이슈

- 정부의 고용/취업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주민등록인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선별적인 대상집단만이 예외적인 지원대상으로 고려되는 상황
- * 정부(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 및 각종 취업 지원 정책들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 대상집단은 결혼이민자(한국국적 자녀 출산 및 결혼생활 유지자, F-6), 영주권자(F-5), 거주(F-2) 체류자격자 등이며, 난민인정자 등이 일부 포함
-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사실상 정부가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고용/취업 관련 사업/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

- 19 -

KLI
한국노동연구원

02 정책쟁점 : 외국인력 도입과정

도입의 내실화 및 시장의 순기능 조성

-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방식 확대
 - 수요자의 외국인력 선택권 강화, 우수인적자본과 희망수요자<근로조건 우대>간 매칭 효율성
 -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재개편 필요 : 산업특성별 수요맞춤형 공급pool 확보 필요
 - 숙련기능인력 수요의 재검토 : 내부노동시장 숙련형성체계 구축 vs 외부 노동시장 활용
- 중개수수료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일반기능인력(E-7-3), 선원취업, 계절근로제도 : 외국인근로자가 공식, 비공식 송출비용 전액부담
 - 고용허가제 및 선원취업은 송출과정의 공식화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완화
- 외국인력 수요의 다변화를 고려한 외국인력 취업알선 시장 양성화

정책방향	외국인력 도입과정의 공공성 vs 시장 기능 조화
-------------	-----------------------------------

- 21 -

02 정책쟁점 : 정책의 분절성



외국인력정책의 통합적 접근 제약

외국인력 정책의 사각지대, 거래비용 증가,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 관련 법 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비전문인력), 출입국관리법(전문인력, 숙련인력)
- 통합적인 인력 활용체계 미흡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비전문인력 관장
 - 전문인력: 법무부 총괄

- ➔ 산업별 숙련수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외국인력 활용전략 접근의 제약
- 외국인력 공급은 증대하고 있으나 비합법체류자도 증대, 지역별수요와 이민자 공급의 괴리 가능성

정책방향

통합적 외국인력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22

02 정책쟁점 : 순환형 이민정책 vs 정주형 이민정책



이민자의 영향

단기적 편익 vs 중장기적 영향은 ?

- 이민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국내 유입 외국인.이민자의 직무 특성상 상당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단에 위치할 가능성 / 이들이 정주화할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거나 이중구조에 편입우려
 - 정주형 이민자들도 수도권 집중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취업 기피, 저출산 함정 가능성
- 중장기적 관점의 이민전략에 대한 실행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 ➔ 단기순환형 활용전략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적 활용전략 및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주민정책, 노동시장정책, 안전망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 필요

정책방향

중장기적 이민의 영향을 고려한 외국인력.이민자 활용전략 모색

24

02 정책쟁점 : 외국인력 체류관리



체류관리의 내실화

- 사업장 이동과 이탈
 - 원칙론적 접근의 현실적 한계: 이동금지, 노동권 보호
 - 매칭의 효율성, 장기근속 인센티브, 법 원칙 강조 등 종합적인 접근 필요
- 수요자 친화적 외국인력 활용
 - 수요자 선택권 강화, 외국인력 자격 검증 및 인증의 내실화로 문제를 완화
- 외국인력 권리 보호, 사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역사회 통합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 및 체류지원 내실화
 - 외국인 체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민간 시장 기능 육성 - 공공서비스와 민간시장의 역할 배분
- 외국인력 수요의 다변화를 고려한 외국인력 취업알선 시장 양성화
- 외국인력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
 - 차등적용: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등적용 불가
 - 돌봄분야: 고비용 문제, 열악한 근로조건을 임금근로조건을 변경을 통한 접근은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움
 -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제고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필요: 출생 아동수 급감으로 아동 지원을 위한 지출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가능

23

02 정책쟁점 : 생산성 제고 및 인적경쟁력 제고



이민자 활용전략

단기적 편익 vs 중장기적 영향은 ?

- 체류 외국인의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이민자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국적동포(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등 노동시장 정책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학생 활용 논의도 대학활성화, 지역인구편입, 활용필요성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대학, 지역사회, 중앙정부의 교육 및 일자리 정책 관점 미흡

- ➔ 이민자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민자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정책방향

이민자 인적자원투자 및 생산성 제고 강화

25

02 정책쟁점 : 지역의 이민자 수요와 공급의 괴리



선주민과 이민자의 지리적 분포

이민자도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선호

- 기초시군구 지역
 - 청년층 유출 등 선주민의 인구유출 현상이 정주형 이민자에게도 투영
- 지역소멸의 대응으로 이민전략은 유효한가?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생활권역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재구조 전략 필요
 - 지역 이민정책도 이러한 정책기조에서 접근

이민자의 지역유입 정책의 한계 및 전략의 재정립

- 선주민보다 더 많은 비용 가능성 : 지역사회통합/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비용도 검토

정책방향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민대응전략 필요

- 행정권역 접근보다는 지역노동시장권역, 생활경제권역 중심

26

02 정책쟁점 : 증거기반 정책 평가 및 연구인프라



증거기반 연구 기능 미흡

관련 통계 자료 한계, 정책평가의 제약, 연구시장의 한계

- 외국인력/이민자(가구)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흡
 -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지역사회 통합 등 관련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는 부족하며 따라서 연구저변 확대가 요구
 -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지역사회 통합 등 관련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는 부족하며 따라서 연구저변 확대가 요구
- 증거기반 정책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인프라 미흡

연구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정책방향

증거기반 정책인프라 강화

28

02 정책쟁점 : 정책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외국인력/이민자 종합컨트롤

법부처 성격의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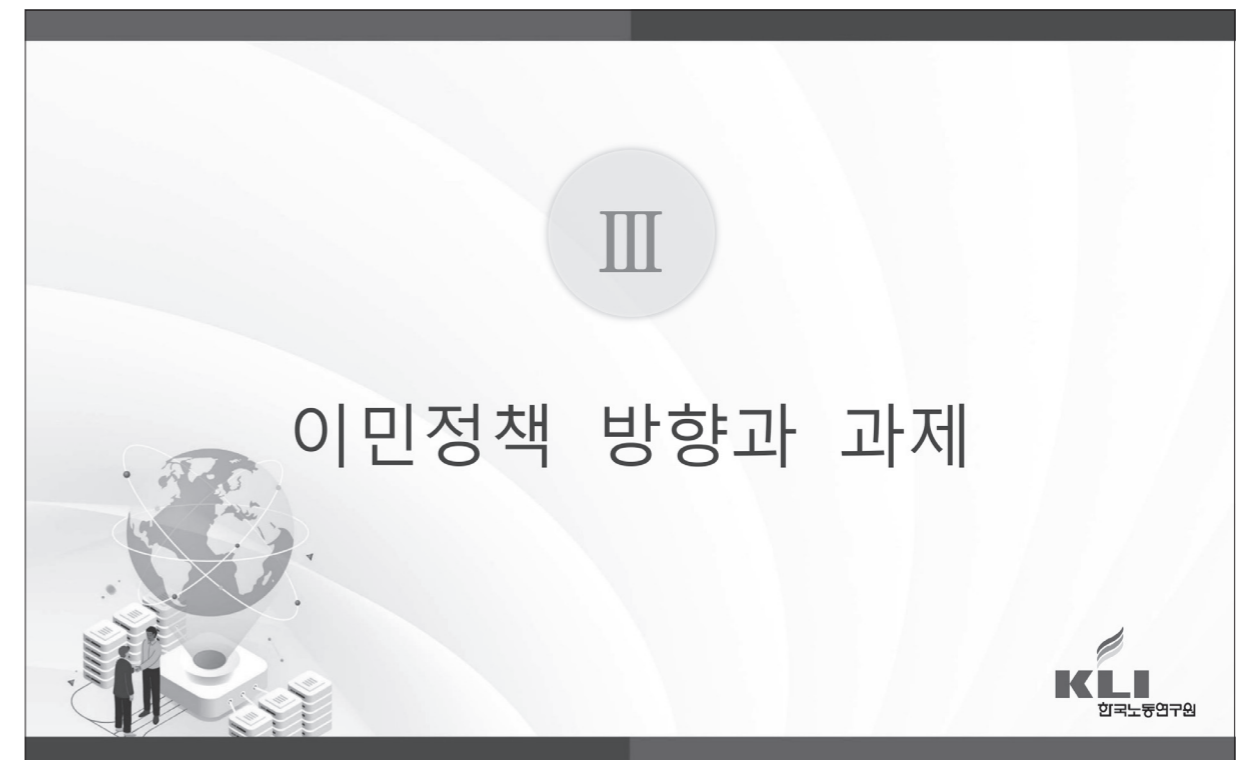
- 외국인력 통합 컨트롤 타워
 -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의 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에 한정
 - 외국인력 도입, 허용분야,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편논의는 주로 고용허가제 중심
 - 산업 및 직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외국인력 수요파악 곤란(논의기구 미흡)
- 외국인/이민자 체류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 통합적 기능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단체 등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기능이 있으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비효율성, 지역별 편차에 따른 서비스 격차

부처별 역할 분담관점보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관련 부처의 기능을 조절하는 접근 필요

정책방향

정책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모색

27



이민자 유입전략 목표

□ 외국인 유입의 활용전략 : 체류 유형별 활용전략

체류형태	정책유형	정책 방향	정책대상
단기순환	노동시장 정책	한시적 체류와 귀국	대부분 비전문인력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시장 정책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거주가능(가족동반)	숙련인력, 전문인력
정주화(영주권, 귀화)	인구유입정책	정주화와 사회통합	선별, 인도주의적 접근

□ 외국인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 사회경제적 편익(비용최소화)

체류형태	고려요소
단기순환	한시적 필요노동력 확보, 사회경제적 비용 크지 않음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생산성, 정주가능성이 높으나 비국민 접근(권리의 제약) 사회경제적 편익_소비, 생활인구
정주화(영주권, 귀화)	사회통합 비용 감수

주요 이슈

□ 이민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이민자 유치, 지역산업 맞춤형 이민자 공급체계, 이민이민자 숙련개발 등

□ 이민자 지역 정착 시스템 구축

- 이민자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 이민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이민자 가족지원 등

□ 지역이민사회 통합 - 노동시장 통합

- 이민자 일자리 지원, 고용 및 소득안정

□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구축

- 지역이민정책의 지역재량권 논의 필요 : 지역특화형취업비자 개편

정주형 이민자의 통합

◎ 중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주 이민자의 경제적 편익제고 전략

◎ 정주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을 강화

-> 교육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대응

◎ 정주형 이민자의 고령화,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 복지지출) 대비

-> (현안) 동포,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등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 복지, 사회적 지위, 소득, 빈곤, 지역사회 통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

◎ 우리보다 앞선 이민국가의 경험

-> 이민자 유입의 중장기적 영향, 사회적 갈등, 국민통합의 어려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효율적 대응

○ 외국인력 필요분야(산업 및 직종, 숙련수준 고려) 정기적 갱신을 통한 맞춤형 공급전략

- 노동시장,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고려한 활용전략과 이에 부합하는 체류자격 연계 및 유연화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도입허용분야

- 사업주 주도성(스폰서십) 강화 : 숙련검증, 체류자격과 연계, 산업(기업) 내부 숙련형성

○ 가족동반형 정주화 vs 체류기간 연장, 순환형 인력활용전략 재검토

- 가족동반형 정주화는 체류자격접근이 아닌 한국사회 통합 가능성 관점에서 접근

- 임금, 소득, 직무,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귀국지원정책과 불법체류 방지 : ODA와 연계, 체류기간 유예(합법화) 관리의 효율화 도모

02 정책방향 : 지역단위 이민전략



행정권역 및 지역생활경제권(노동시장권)을 고려한 접근

- 현황 및 실태에 따른 증거기반 정책방향 도출
 - 외국인 수요파악
 - 외국인 주민 실태(거주, 지역 정착, 지역사회 통합)
 - 지역주민의 이민자 인식
- 지역인구 및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정책방향 도출
- 기본방향 도출
 - 현 실태 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 단계적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 도출

- 34 -

04 지역단위 이민전략



행정권역 및 지역생활경제권(노동시장권)을 고려한 접근

- 현황 및 실태에 따른 증거기반 정책방향 도출
 - 외국인 수요파악
 - 외국인 주민 실태(거주, 지역 정착, 지역사회 통합)
 - 지역주민의 이민자 인식
- 지역인구 및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정책방향 도출
- 기본방향 도출
 - 현 실태 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 단계적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 도출

- 36 -

04 지역단위 이민전략



기본 방향

- 이민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이민자 유치, 지역산업 맞춤형 이민자 공급체계, 이민자 숙련개발 등
- 이민자 지역정착 시스템 구축
 - 이민자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 이민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이민자 가족지원 등
 - 중장기적으로 정착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이민사회 통합 -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설계
 - 일자리 지원 : 고용서비스, 훈련, 인적자원개발 → 지역맞춤형 훈련
 - 고용 및 소득안정, 사각지대 해소, 취약화 방지
-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구축
 - 칸막이 해소, 부서간 협력, 예산 배정, 지역 외국인 지원단체간 연계 협력
 - 주민정책 틀에서 일자리, 복지, 주거, 아동, 교육 정책간 연계

- 35 -

04 지역단위 이민전략



외국인력 활용 제도 운영 정비와 지원관리체계 구축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지역특화비자/유학생 활용/기타 이민자 취업자
 - 사업주 : 외국인 고용관리 관련 행정서비스 수요
 - 외국인 : 일자리, 주거, 교통, 생활지원서비스 수요
 -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 지역내 취업자들의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도 제고
 - E-9 → E-7-4 → F-2 → F-5 : 단계별 이행과 지역정착도모
 - 각 단계별 이행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정착화 도모
 - 교통, 주거, 문화, 교육, 지역주민과의 통합 등 지역사회 구성원화
-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
 - 공공부문의 역할, 민간시장 기능 강화 등 공공과 민간시장의 역할 정립
 - 민간 시장 기능 활성화 : 수익자 부담(정부보조 가능), 지역일자리 창출

- 51 -

- 50 -



<발제 4>

교회의 역할

유상혁 신부
(서울대학교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민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역할

시작하며

이주는 역사 안에서 계속되는 사회 현상입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 안에서 이주는 점점 많아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존재의 이동은 여러가지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이주민과 난민은 사회 문제로 제기 되면서 여러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세 명의 교황님들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교황의 시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민자와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윤리적 책임, 사회적 정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존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끔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민자와 난민은 단순한 숫자나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교황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 식량, 쉼터,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을 포함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주 문제를 인권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국가들이 이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도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고, 그는 전쟁, 박해 또는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종종 집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의 곤경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은 실향민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분쟁, 불평등, 빈곤을 포함한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연대와 정의

연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에서 핵심입니다. 그는 국제 사회에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개인과 국가에 그들이 하나의 인류 가족의 일부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연대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류 공동체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주민들의 착취와 소외에 반대하며,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교황은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가난한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부유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선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강제 이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빈곤을 근절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요인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민자와 난민의 필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환대는 기독교의 덕목이며, 교회는 신앙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이주민을 옹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본당, 교구, 그리고 종교 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에게 물질적·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제공, 음식, 법적 지원, 새로운 공동체로의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만남과 포용의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교회 기관이 문화 간 다리가 되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주를 교회의 복음화와 풍요로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주가 문화적·영적 자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교회를 활성화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더 큰 일치와 일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이민자들에게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통합되도록 격려했으며, 받아들이는 공동체에게는 이민자들이 가져오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국제 기구에 대한 호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제 기구에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주할 권리와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이주를 규제할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규제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차별이나 배제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국가들에게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이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그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착취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주의 근본 원인과 평화를 위한 호소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난민과 이민자의 고통을 갈등, 불의, 불평등 같은 더 큰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민자가 폭력, 억압, 경제적 절망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종종 체계적 불의나 잘못된 통치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정의와 연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사회 구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빈곤과 같은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 자원의 공평한 분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합과 상호적 풍요로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민자들이 수용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두 방향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의 법과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수용 공동체는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문화적 기여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상호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들이 접촉함으로써 이해와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황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이러한 태도가 평화로운 공존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태도에 맞서 싸우며, 차이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만남의 문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자와 수용 공동체가 서로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존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주의 영적 차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주의 영적 차원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민자와 난민의 경험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한 성가정의 성서적 여정과 비유하며, 이주를 깊은 인간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종종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황은 이민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기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영적 지원의 원천이 되어, 목회적 돌봄, 전례 참여의 기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 소속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기도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결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생각은 인간 존엄성, 정의, 연대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는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자,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 사회가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개방성, 환대, 옹호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모든 이민자와 난민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정의를 위해 일하며, 만남과 포용의 문화를 촉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주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영감을 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모든 문화가 존중되며, 모든 개인이 번영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의 세계 평화의 날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신학적 통찰, 윤리적 의무, 그리고 연대의 요구를 결합하여 현대 사회에서 이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 문제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주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인간 발전의 기회를 찾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로 보았습니다. 교황은 이주민과 난민이 단순히 '문제'나 '통계'가 아닌, 존중과 공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임을 사람들에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정부와 국제기구에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주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주할 권리와 함께 고향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머무를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의 근본 원인과 윤리적 대응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다루며, 많은 사람들이 갈등, 빈곤, 박해, 기회 부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제 이주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근절하며, 갈등 지역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주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교황은 또한 이주의 윤리적 차원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연대가 정의와 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인류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주민의 경제적 착취를 강력히 반대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학대도 비난했습니다. 그의 견해에서, 이주 문제에 대한 진정한 윤리적 대응은 개인의 자비심과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구조적 개혁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 환대하는 공동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회를 이주민과 난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환대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촉구했습니다. 교회가 환대를 베푸는 것은 단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공동체가 이민자와 난민에게 주거, 음식, 교육, 의료 등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들의 문화적·영적 필요에 민감한 사목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당이 이민자들의 집처럼 느껴지며, 전례에 참여하고, 새로운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구상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회가 이주민의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주교, 사제, 평신도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적대적으로 대우받는 이주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자들이 사회적 결속과 문화적·민족적 그룹 간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통합과 상호적 풍요로움

통합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주에 관한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는 통합을 이주민과 받아들이는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두 방향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주민은 수용국의 법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수용 공동체는 이주민의 문화적 기여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통합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상호적 풍요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주민들이 수용 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여, 즉 문화적 다양성, 기술, 새로운 관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이주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통합을 촉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이니셔티브를 촉구했습니다.

이주의 가족적 차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주로 인한 가족 분리가 가져오는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황은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개인에게 중요한 지원의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이주 정책이 가족이 함께 있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주민 가족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되면서도 그들의 문화적·종교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가족 단위는 이주민들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글로벌 연대와 국제 협력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주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국제 사회의 협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 갈등, 기회 부족과 같은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공정한 무역 관행, 부채 탕감, 개발 원조가 출신국을 지원하고 강제 이주의 압박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 존엄성과 연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이주할 권리와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이주를 규제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지만, 그러한 규제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의 영적·도덕적 차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의 영적·도덕적 차원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주가 복음화의 기회이며 신앙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신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가톨릭 이민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교회의 삶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주민들에게 다가가 대화와 이해, 상호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주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 여정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교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서적 여정과 성가정의 여정을 이민자들의 경험과 자주 비교하며, 이주가 이주민과 그들을 환영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혐오에 맞서고 만남의 문화 촉진하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평화와 통합의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고, 신앙인들이 용기와 사랑으로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국적, 민족, 이주 상태에 따라 누구도 판단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만남의 문화”를 촉진할 것을 권장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만남이 장벽을 허물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며,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언론, 교육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촉진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도와 영적 연대의 역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기도와 영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민자들을 기도에 포함시켜, 그들이 여정에서 보호받고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에게는 신앙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도록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모든 사람, 특히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영적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민자들이 예배,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이민자와 난민을 위해 특별한 전례와 기도회를 열어, 교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대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론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생각은 인간 존엄성, 정의, 연대에 대한 그의 깊은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물질적·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민자와 난민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을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상호적 풍요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교황의 비전은 옹호, 환대, 영적 동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정의를 위해 일하고, 차별에 맞서 싸우며, 만남과 포용의 문화를 촉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고향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이주에 대한 가르침은 이주와 난민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계속해서 영감을 주며, 모든 개인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모든 문화가 존중되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정의 속에서 번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민자와 난민의 옹호자로서, 세계 평화의 날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성명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반성은 자비, 포용, 체계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가 모든 이주민과 난민의 존엄성, 정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만남의 문화’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의 지닌 고유한 인간 존엄성을 이주 문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는 이민자와 난민이 단순한 통계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돌봄, 인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만남의 문화’를 촉구하며, 이주민들을 꿈과 경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희망을 지닌 동료 인간으로 바라보도록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이 만남의 문화는 각각의 이주자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진정한 공감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은 자주 “무관심의 세계화”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이민자와 난민의 고통에 둔감해지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가지 행동: 환대, 보호, 증진, 통합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끌 네 가지 기본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환대, 보호, 증진, 통합.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주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 환대 : 교황 프란치스코는 개인, 공동체,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주를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박해와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특히 열린 마음과 열린 국경으로 맞이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보호 : 프란치스코는 이민자와 난민을 착취와 폭력,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주 여성과 아동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인신매매와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합니다. 교황은 국제 협정과 국가 법률이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이 여정 전반에서 우선 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증진 : 이민자와 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육, 의료, 고용뿐만 아니라 문화적·개인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는 이민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주민 자신뿐만 아니라 수용 공동체에도 이익이 되며 상호 번영에 기여한다고 강조합니다.

- 통합 : 통합은 교황의 비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민자와 수용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두 방향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민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나눌 기회를 가져야 하며, 수용 공동체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견해에서 통합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대와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연대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주에 관한 메시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는 자주 국제 사회가 전쟁,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는 이주가 종종 선택이 아닌, 불리한 조건에 의해 강요된 필요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고향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황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사람들이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정책, 평화 증진, 그리고 점점 더 강제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이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강요된 현실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 “야전 병원”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야전 병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제와 불의, 차별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본당, 교구, 가톨릭 단체들이 이주민과 난민을 맞이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며, 통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주민들이 포함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목적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공동체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 불의를 고발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배제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구조에 도전하고,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며, 이주민과 함께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의 본연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외국인 혐오와 두려움에 맞서기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민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두려움의 정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류를 나누는 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대신에 그는 이해와 통합을 증진하는 다리를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종종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정책이 인간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주민의 존재를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주민들이 수용 사회에 가져오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믿으며, 공동체가 다양성을 강점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주민을 낙인찍는 수사를 거부하고, 대화와 포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주의 가족적 차원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주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주 정책으로 인한 가족의 분리와 이주민 가족이 단결을 유지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족 분열로 이어지는 관행을 경계하고, 이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력한 가족 단위가 이주민의 복지와 그들의 수용 공동체 내 성공적인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교회가 이주민 가족을 지원하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며, 이주 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의 문화적·영적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난민과 인도적 대응

교황 프란치스코는 난민의 어려움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난민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묘사하며, 국제 사회가 난민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난민이 존엄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합니다. 그는 난민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착과 조건이 허락할 때 자발적 귀환을 포함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난민에 대한 자비로운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이 난민을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는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을 돕는 데 관대함을 보여준 국가와 공동체를 칭찬하며, 국가 간의 더 큰 부담 분담을 요구합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난민을 돕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기부할 것을 격려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핵심 요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주를 통한 복음화의 기회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주를 도전이자 복음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이민자들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주가 교회가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이주민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사목적 돌봄을 제공하며, 이들이 예배하고 교회의 삶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다문화 전례와 사목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이주민들이 교회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그들의 문화적 신앙 표현으로 지역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결론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생각은 인간 존엄성, 자비,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려는 깊은 헌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신자들과 국제 사회에 이주민을 문제로 보지 말고,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도록 도전합니다. 그의 네 가지 지침(환대, 보호, 증진, 통합)은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를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자 지원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톨릭 공동체가 환대하고, 정의를 옹호하며,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영적 도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는 세계에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포함되는 만남의 문화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세상이 무관심을 넘어 이민자와 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와 정의에 헌신하며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출신지와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가족이 보호되고, 다양성이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이주민 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

한국 안에서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점점 이주민과 난민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이나 난민에 관한 사목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현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고 각 교구에 공유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교구에 지금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일하는 사목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여러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들도 고려하여 교회는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하고, 신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실천해 나갈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생명, 가정,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이주민과 난민의 생명과 특별히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이 사회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주민과 난민은 교회의 따뜻한 동반에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시작해야 할 복음화입니다.

교구

지금 각 교구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사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년에 몇 번 연수와 피정을 통해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지역의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장점은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효율적인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러한 개방성은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닫힌 문화는 본당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사목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한 공동의 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많은 교구에서는 카리따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기구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차원이 아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사목은 다양한 사회사목 분야와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의 빈민이기도 합니다. 교구 안에 다양한 사회사목 분야와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제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각 지역 지구에 이주민을 위한 센터에 활동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이해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많은 수도자들이 교구 안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에 온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하여 타지에서의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사제들과 전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제들과 신자들은 교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교회의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와 본당

교황님들은 하나 같이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작은 시작은 본당입니다. 이주민들도 문화나 언어적 한계 때문에 본당에 가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환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경은 단순히 이주민과 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환대의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곧 이주민과 난민의 환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가정이 한 난민 가족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구 사회사목 안에 이주사목만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몇몇 지구 안에서 이주민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여러가지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활동가와 사목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본당에 사회사목분과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민과 난민 만을

위한 것이면 안됩니다.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는 여러가지 폭력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는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개인

‘한 가정 한 난민’과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주민 가정이나 난민 가정과 교류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언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만남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연결된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이 다양성 안에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영적 준비를 통하여 본당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스스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무관심에서 벗어난 약자들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성령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무리

교황님의 이야기 안에서 한국 교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황님들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일치와 희망을 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우리도 다양성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촘촘한 그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Memo



Memo

